

“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 주춧돌”

李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주재
“세종 집무실 건립 차질없이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 집무실과 세종(국회)의 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너무 여유 있고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의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할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5대 국정 목표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대 국정목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의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가 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감위 설치법 등이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지게 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패킷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與, 사법부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 가해”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압박 규탄
필리버스터·李 대통령 탄핵 검토

국민의힘이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부적 사법부 초토화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수사, 재판, 판결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설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조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찬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한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며 “사법부를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대여,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 의원 사이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국민의힘 대여투쟁 방향이 국회 담벼락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시기,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자금 말씀하신 재판 재개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권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조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옹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美 근로자 구금·한미통상협상’ 최대 화두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

韓 공장 표적·대미투자 금액 등 질문
조현 “美, 이민 문제로 변한 것 같아
동맹국에 협력하던 과거 모습 아냐”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이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선)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두

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다. 미국 14개 주에 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누적 투자금액이 2863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불, GDP(국내총생산)의 19.6%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쥐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해도 너무나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

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유럽,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 우방국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동반자법 등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강구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받은 충격은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착용시킨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라며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된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휴약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 사과했어야 한다. 미국도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